

‘포괄적 안보전략’(CSS) 개념의 요약문

노틸러스연구소

2013년 11월 30일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 여섯 개의 상황규정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화를 개시하여 전략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포괄적 안보해결을 도출해 낼 것을 건의한다. 이 메모는 왜 이런 접근법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지 또 이 접근법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조선 측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핵무기는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 지역의 핵보유국 세 나라는 서로에게 핵위협을 주고 받을뿐 아니라, 의도와 무관하게 그들 중 일부는 조선, 대한민국(이하 ‘한국’) 및 일본에게도 핵위협을 주고 받는다. 핵전쟁의 위협은 1950년 이래 조선반도 분쟁의 일부가 되어 왔으며, 미국이 한국과 심지어 동북아 전역에 핵무기를 전진배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위협은 여전히 조선에 존재하고 있다.

조선의 최근 핵개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추세를 역전시켰다. 미국은 조선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대한 핵위협 수준을 높였다. 중국은 핵무기고를 현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비핵보유국들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약화를 상쇄하기 위해 핵무기 의존도를 증가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은 무기급 플루투늄을 과도하고 다량 비축 중이다. 한국은 재처리 및 농축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핵무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전쟁위협과 핵전쟁에로의 확대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관련국 모두에게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추세는 또한 비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약속과 핵보유국들이 비확산조약(NPT)에 명기된 자신들의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핵무기고를 축소시키겠다는 약속을 약화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인 비확산체제를 와해시키고 있다. 더구나 조선이 핵무장을 하면, 이는 비확산조약체제를 부정하게 되며,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안보분야에서 다른 주요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분산시킬 것이다. 이는 또 조선의 고립 가속화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핵무장한 이웃을 또 하나 더 두는 것은 분명 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인근 국가들이 동맹, 상호운용이 가능한 군대 및 탄도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화시킬 새로운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또 이 지역에서 무기경쟁을 초래하고 경제통합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조선을 건국한 고 김일성 주석 자신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조선반도에 ‘비핵평화지대’를 주창하고 지지했다는 점은 주목 할만 하다. 《김일성전집》을 살펴보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 한 김주석의 개회사부터 그가 서거하기 일주일 전인 1994년 6월 30일 벨지끄 로동당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나눈 대화까지, 그가 15년 동안 무려 36회나 반복해서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를 제안(‘동북아비핵평화지대’까지 포함하면 44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안은 아직까지 유효한데, 거기서 연방국가는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첨부 1). 김일성 주석은 또 일본사회당과 공동으로 발표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1981년 3월부터 동북아비핵평화지대 창설을 제안했었다. 1986년 6월 23일에 조선정부는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1986년 9월초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1987년 6월 13일 조선 외무성은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고, 1988년 10월 중순에는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1992년 1월 20일, 조선은 한국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는데, 이는 다른 관련 당사자와 맺은 조선반도 비핵화 관련 첫 공식 합의였고, 이는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창설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서거할 때까지 이 공동선언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조선정부의 정책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2013년 6월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전략적 주도’의 모습을 보이고 나왔는데, 이는 조선-한국전쟁 종결문제, 정전문제, 평화체제 문제, 조선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남북조선의 충돌, 군사안보적 위협과 적대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줄 지도 모른다. 김 제1비서의 전략적 선택은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주석 십근평(시진핑)이 자신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과 협력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공평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헬퍼린(Morton Halperin)은 조선핵문제를 좀더 폭넓은 지역안보 맥락에서 다루기 위해 여섯 가지의 상황규정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다자적이고 포괄적인 ‘포괄적 안보전략’(CSS)을 제안하였다. 여섯 요소는 다국적 그룹과 (미국에서는) 초당파적인 그룹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었다.

- 조선반도 전시상태 종결
- 준수여부의 감시와 위반여부의 결정을 책임지는 영구적인 이사회 창립
- 상호위협 감축 및 상호 적대화 철회의 선언
- 원자력 및 여타 에너지 필요에 대한 원조
- 제재 해제
- 비핵무기지대(NWFZ) 창설

‘포괄적 안보전략’의 틀은 조약의 형태를 취할 예정인데,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를 일부 본떴기 때문에 동북아우호협력조약(NEA-TAC)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역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비핵보유국들이 핵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조약만이 조선이 핵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당하지 않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조선이 동북아비핵무기조약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조선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 명백한 모순을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아래에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이 ‘포괄적 안보전략’을 지지하고 동북아우호협력조약과 동북아비핵무기지대조약에 가입할 경우, 핵위협 해소 뿐 만 아니라 경제 발전, 조선-한국전쟁의 종결, 평화체제 수립, 남북 화해협력,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과 및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분야에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괄적 안보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섯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들은 전부 정치적 의지와 정치적 지도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조선이 모든 잠재적 이익과 자신의 비핵화를 주고받고할 정도로 충분히, 결정적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둘째, 미국과 중국의 정책조율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셋째, 미국, 한국 및 일본이 이 ‘포괄적 안보전략’에 반대하는 국내정치에서 이 전략에 대한 반대세력들을 설득하여 끌어들이고 관련 문제점들을 극복할 능력은 어느 정도 인가? 넷째, ‘핵확장 억지력’이 조선반도내 분쟁 종결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창설 협상을 방해하기 보다는 도움을 줄 것인가? 다섯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보유국들의 핵 비공격 보장은 조선에게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동북아비핵무기지대는 일찍이 1980년부터 김일성 주석이 제안했던 비전과 그 이후의 조선 지도자들이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 비핵화 ‘유훈’을 실현시키겠다는 약속들과 어느 정도로 일치할 것인가?

우리는 1972년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모택동 중국 총서기를 만나고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미대통령이 미카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을 만나면서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이미 합의한 ‘신형 대국관계’ 속에서 확실히 상호 협조할 수 있다면, 2014년은 동북아에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해이다. 김정은 제1비서가 ‘포괄적 안보전략’ 틀 안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미국이 이에 발을 맞추는다면, 모든 관련국들이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새 시대’ 개막을 위해 자신을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한국 및 일본은 조선의 비핵화에 보답함으로써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관련국들이 이 지역의 경제번영, 조선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동북아 비핵화의 결실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포괄적 안보해결'과 '비핵무기지대 설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얻을수 있는 이익**

노틸러스연구소

2013년 11월 30일

이 메모는 미합중국(이하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및 여타 조선반도의 분쟁 관련국들이 '포괄적 안보전략'(CSS)의 적용과 비핵무기지대(NWFZ)의 창설을 통해 조-미관계에서 돌파구를 가져올 새롭고 지속가능한 핵위협 관리 틀을 형성할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메모는 김일성 주석의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언급되고 있듯이(첨부 1), 미국이 대조선 핵무기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조선반도를 비핵무기화하자는 1980년부터 시작된 조선의 오래된 요구를 핵심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김일성 주석 자신이 동북아 및 전 세계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주창하고 지지했다. <<김일성전집>>을 살펴보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의 그의 개회사부터 그가 서거하기 일주일 전인 1994년 6월 30일에 벨지끄 로동당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나눈 대화까지, 그가 15년 동안 무려 36회나 반복해서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를 제안('동북아비핵평화지대'까지 포함하면 44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6차 당대회에서 그가 제안한 "연방제" 통일안은 아직까지 유효한데, 거기서 연방국가는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첨부 1). 김일성 주석은 또 일본사회당과 발표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1981년 3월부터 동북아비핵평화지대 창설을 제안했었다. 1986년 6월 23일에 조선 정부는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1986년 9월초 평양에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1987년 6월 13일 조선 외무성은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에 대한 선언을 또 발표했다. 1988년 10월 중순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1992년 1월 20일, 조선은 '조선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는데, 이는 다른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맺은 조선반도 비핵화 관련 첫 공식 합의였고, 이는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창설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서거하기 전까지 이 공동선언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조선정부의 정책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 메모는 또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비핵평화지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괄적 안보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 지역에서 비핵평화지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 조건들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포괄적 안보전략"(CSS)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바, 조선 측 회담자들과 토론을 위해 이를 제안한다.

이 메모는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가 현재 명확히 당과 인민군 등 조선의

정치 경제를 통솔하여 확실한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했으며 재확립된 ‘당의 군에 대한 우월성’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정은 제1비서는 국내적으로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 경제제도 및 관리체제를 발전시키는 극적인 변화(개혁)를 도입했으며, 기존의 라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에서의 특별 경제/무역/공업/관광지구 외에 중앙급 10개, 지방급 13개 경제/관광/농업/수출가공 경제개발구(특구)를 발표했다. 이러한 경제 개혁과 개방의 성공을 위한 노력으로서 김정은 제1비서는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및 한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다. 조선은 21세기 조선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문제, 핵문제, 그리고 전쟁위협 문제 등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21세기 시대를 열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제1비서와 중국지도자 시진핑(시진평)과의 협력과 공조로 인하여 중국은 지역에서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조관계를 재설정 할 수 있었다. 시진핑은 대립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충돌의 방향이 아닌 윈-윈 협력을 강조하는 ‘신형 대국관계’로 규정한 중미관계의 틀 안에서 조선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결심을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비핵화 문제”를 사용했다. 중국이 이중 사용 용도의 대조선 수출품 금지목록을 전례없이 발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미국 및 주변국가들과 대결함으로써 ‘신형 대국관계’를 위협하기를 원치 않고, 또 조선핵문제가 미국과 맺은 새로운 관계에 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2013년 5월부터, 특히 2013년 6월부터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 핵위협을 중단하고 조선반도 전역에서의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핵무기를 최종 포기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며—이는 동북아비핵무기화시대 창설의 의미있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있다—중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와 협상” 공세를 펼쳤다. 조선의 비핵화의 주교반기 대상은 명확히 대조선 제재, 조선 불인정, 조선에 대한 군사위협과 같은 미국의 반조선 정책의 종결과 조선에서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각 나라의 입장 간의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를 고려하여, 우리는 조선과 미국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를 건의한다. 모턴 헬퍼린(Morton Halperin)은 보다 넓은 지역안보의 맥락에서 조선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섯 개의, 상황규정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요소로 구성된 다자적 ‘포괄 안보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여섯 요소는 조선반도 전시상태 종결, 준수여부의 감시와 위반여부의 결정을 책임지는 영구적인 이사회 창립, 상호위협 감축 및 상호 적대화 철회의 선언, 원자력 및 여타 에너지 필요에 대한 원조, 제재 해제, 비핵무기시대 창설이다. 일단 이 여섯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 평화정착, 정치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협력이라는 네 가지 과정을 병행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에게 특히 동북아비핵무기시대 하에서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등 충분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조선이 위에서 제안한 조약의 일부로 규정한 내용에 따른 감시와 검증 하에 자신의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 ‘포괄적 안보전략’에 따르면, 비핵보유국들은 만일 조선이 일정한 합의된 시간 내에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파기하지 않으면, 조약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섯 가지의 중요한 질문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관련된 것이다.

첫째, 조선이 자신이 취할수 있는 모든 잠재적 이익과 자신의 비핵화를 주교반기

할 정도로 기꺼이, 결정적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김정은 지도자의 ‘새 시대’ 개막을 위해, 조선이 이러한 전략적인 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경제 발전, 조선-한국전쟁 종결, 평화체제 구축, 남북 화해협력,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 제거를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 핵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역 틀 마련 등이다.

둘째,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협조에서 양국이 한편으로는 조선반도 문제의 근본원인인 조선-한국전쟁의 지속과 정전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물인 핵문제, 제재, 적대행위 등을 동시에 그리고 확실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기꺼이 또 창의적으로 나올까?

셋째, 미국, 한국 및 일본은 대화와 협상 대신 압력과 제재를 선호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성향을 포함한 국내정치 어려움을 어느 정도도 능력있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은 심하게 분열된 사회이며, 현재 한국정부는 확신에 찬 “구시대 인물들”이 주요 안보정책 결정기구의 수뇌부에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안보이익을 가진 반 조선 정치세력이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넷째, 핵과 제재식 확장 억지력이 조선-한국전쟁 종결과 동북아 비핵무기시대 창설 협상을 방해하기 보다는 도움을 줄 것인가? 만일 조선이 동북아비핵무기시대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는 조선과 중국의 핵, 안보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자신의 안보와 여타 목적을 위해서는 핵무장보다는 동북아비핵무기시대조약의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 예컨대 조선에 대한 핵무기 비공격과 같은 보장이 더 믿을만 하다고 조선을 설득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기꺼이,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비핵무기시대는 일찍이 1980년부터 김일성 주석이 제안했던 비전과 일치할 것인가?

조선핵문제는 조선의 자의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무엇보다도 김정은 제1비서가 자신의 21세기 시대를 개막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는 조선의 정책과 전략을 이해하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분석 메모는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처음 2년간 김정은 제1비서의 집권과 자신의 새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검토, 김정은 지도자의 “전략적 리더십”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선택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선/중국 측과 미국/한국 측 노력의 불균형, 김정은 지도자의 더 발전된 경제실적 추구, ‘포괄적 안보전략’을 채택할 경우 조선이 취할수 있는 이익들, 그리고 조선에 대한 ‘포괄적 안보전략’의 함의와 고려사항들이다. 이 여섯가지의 집합은 우리가 제안하는 ‘포괄적 안보전략’과 동북아비핵무기시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기 이것들을 조선측 회담자들과 토론을 위해 제안한다. 토론을 통해 이 기초들을 수정하는 경우, ‘포괄적 안보전략’과 동북아 비핵무기시대 개념에 대한 수정안도 뒤따를 것이다.

1. 김정은 제1비서의 집권과 그의 새 시대 준비

김정은 제1비서는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 서거 직후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함으로써 2011년 12월에 공식 집권했다. 그는 2012년 4월 군, 당 및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이 권력기관들의 최고직위들에 취임했다. 같은 달, 그는 그의 조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대항하여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발사로 기인한 난국으로 인해 미국과 조선 간에 맺어진 2012년 2월 29일 합의(일명 ‘윤일’ 거래)는 무너졌다.

2012년 11월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으로 재선되자마자 조선은 2012년 12월에 또 한번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는 명백히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해인 2012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구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으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는 또 하나의 혹독한 반 조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조선은 바로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했고 또 다시 핵실험을 했다. 이에 또 한번의 혹독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통과됐다. 조선과 국제사회의 대결은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폭격기로 한국영공에서 수십 년 만에 최초로 조선에 대한 가상 핵공격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2013년 3-4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라는 한미합동동군사훈련 때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이 합동군사훈련은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조시켰다. 조선은 3월 31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한법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로선” (“병진로선”)을 통과시켰다. 조선은 핵무기보유를 함으로써 새로운 전쟁억지력을 갖게되어 이제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양자 사이의 연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조선이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2013년 초반 조선반도에서 극적으로 고조된 전쟁위험은 1990년대 중반과 그 이전 1976년 8월 판문점에서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위였다.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지도자의 개인적 의도와 동기를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긴장완화와 위기해소를 위해 대화를 제안했다.

2013년 김정은 제1비서 통치 첫 5개월 동안 발생한 근래 거의 전례 없는 수준의 전쟁위험은 김정은 지도자의 ‘새 시대’ 개막과는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 지도자는 새 시대 개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하고, “전쟁과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와 같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김정은 제1 비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을 여러 세대 동안 괴롭혀 왔던 “전쟁과 평화”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필요한 “평화적”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황을 역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김정은 제1비서의 전략적 리더십과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선택

2013년 5월 중순까지해서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자마자, 김정은 지도자는 5월말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 선택을 했다. 그는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자신의 특사로 파견했다. 섭근평을 만난 최룡해는 “6자회담과 여타 형식을 통해 핵문제와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조선의 의지를 선언했다.

2013년 6월부터 조선은 중국의 압력은 아니지만 명백한 동의 하에 조선의 “가장 급선무”인 경제(문화)발전과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한 강력한 대화와 협상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조선은, 구시대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또 적대 대신 협조를 제안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오래된역사

적 현안들을 과감하게 해결하는 것이 김정은 제1비서의 의지임을 표명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분명히 경제 발전과 안보 및 평화의 증진을 위한 유리한 외부환경을 만들어내기 과거로부터 의미있는 탈출을 시도했다.

조선 매체들과 일본에서 재일 총련이 발행하는, 조선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신문 (《조선신보》)은 김정은 제1비서의 “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과 “공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혁신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들은 이런 “대담한 대화 공세”가 “단순한 실무적 접근, 기술적 양보가 아니라 전략적 리더십의 발현”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지도자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적 결정에 부합하여 김정은 제1비서는 한국과 미국을 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앞서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벌어졌던 ‘치킨게임’의 희생제물이 됐던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산가족상봉도 허락했고(나중에 아마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이 없는 데 대한 반응으로서 이를 재고하여 무기한 연기했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제안했다.

김정은 지도자는 2013년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 담화”에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조선 비핵화의 요점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며,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또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를 뜻하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 그 목표라고 했다. 그리고 조선의 핵무기 보유 결정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며, 조선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조선의 이러한 대미 고위급대화 제의가 잠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제안이 ‘동북아비핵무기시대화’를 창설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2013년 8월 29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각도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여러가지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조치들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랭전시대의 유물인 적대관념과 동족대결정책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했다. 참고로, 《조선신보》는 이를 조선의 “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표현했다. 8월 29일 담화는 조선은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대와 민심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조선은 2013년 9월 18일 중국이 북경에서 개최한 “정부 및 민간단체” 6자회담 세미나에서도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김계관 제1부상과 리용호 부상이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최근에는 리용호 부상이 조선이 9.19공동성명과 2.29합의의 이행을 다시 시작하고 “비핵화, 정치, 군사 및 경제”의 네 분야에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한국 및 여타 나라들이 조선반도 전역을 비핵화하고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면서 조선-한국전쟁의 종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의 전환, 적대 포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선이 2013년 3월 31일 발표된 “전략적 노선”을 유연하게 해석, 적용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런 전략노선의 조정은 (합의와 이행의) 순서대기는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이 조선 자신의 제안과 중복되고, 보완적이고, 보충하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 조선이 이를 기꺼이 수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조선의 이러한 중요 선택과 김정은 제1비서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은 21세기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도록 고안된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대담한 행동계획, 통이 큰 문제타결안”은 경제, 문화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에서 언급한 상황의 발전이 과연 매우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해법 모색의 기회로 이어질 것인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관련국들의 상대방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성공과 실패는 미국, 한국 및 다른 당사국들이 조선의 전략적 노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조선을 포함한 그들 모두가 조선반도와 동북아 미래에 대해 어떤 중요 선택을 내리느냐 달려있다. 최근, 조선은 이산가족상봉을 예정일 4일 전에 전격 연기하는 식으로 한국 박근혜정부의 “신뢰정치”와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조선은 박근혜 정부가 사용한 “원칙의 승리”, “상식과 국제규범”, “신뢰 프로세스 정책” 등의 표현이 “조선을 겨냥한 독설”이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로서는, 남조선 양측 모두 치킨게임의 상황에 재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한 조선의 대화와 협상 주도권과 공세는 조선과 중국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섭근평(시진핑) 본인이 오바마로 하여금 6자 회담을 재개하도록 직접 설득했는가 하면, 중국 외교부장 왕의(왕이)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존 케리 미국무장관과 만나 모든 관련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합리적인 문턱”의 설정에 대해 상의했다. 왕의와 무대위(우다웨이)는 둘 다 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들이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주목할만하다.

3. 6자 회담 재개 노력의 불균형: 조선/중국 대 미국/한국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현 정치상황의 특징은 관련국들이 조선/중국 대 한국/미국/일본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데 대하여 양 진영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긴밀히 상의하면서 주도적으로 남북조선의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에게 대화와 협상을 제의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조선은 최룡해 특사의 북경방문 이후,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제안함으로써 한미양국에게 대화와 협상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섭근평은 2013년 9월 6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직접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에게 중국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확실히 한반도 비핵화과정을 진전시켜나가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의 빠른 재개를 위해 모든 관련국들이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직까지는, 한국과 미국 측의 반응은 수동적이며 조선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선이 자신의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미국은 대화와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은 남북조선 관계의 완전한 회복과 발전으로 이어질 조선과의 전면협조를 선택하지 않고, 국내정치의 득실을 저울질하면서 최소한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4.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발전 노력

김정은 제1비서는 경제실적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조선은 1990년대 중반에 기아로 커다란 난관을 겪은 후, 경제 회복과 발전은 모든 수준에서 조선의 최우선 과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리용호 부상의 최근 언급에 의하면, 김정은 제1비서는 최근 그의 현지도 중 무려 90%가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최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고 있다고 한다.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은 강력한 경제체도를 발전시키고 금융, 무역, 투자를 위해 외부의 경제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조선은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대조선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고, 제재가 지속되는 한 전면적인 경제회복은 비록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조선은 또 그들의 핵무기고가 조선이 국제경제 분야에 대해 문을 닫아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조선은 자신의 핵무기 보유가 대결상황의 돌파구 마련, 대외경제관계의 재활성화, 그리고 결국 대조선 제재의 해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조선이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의 연해주, 동북아 전역, 그리고 더 넓게는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제논리는 중국, 러시아 및 유라시아에로 가는 육로는 해상 통로로 쉽게 우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더구나 현재 조선이 외부세계와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 중인 상황까지 참작하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조선 자신이 대외무역의 다양화, 원산과 칠보산의 관광특구화, 그리고 경제특구들은 모두 “대외관계가 개선되어야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획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 할만하다.

조선은 2012년 6월 농업과 산업 분야의 경제관리제도에서 극적인 변화를 채택하여 실험하기 시작했고(일명 “6.28 조치”), 보도에 의하면, 이 변화를 확대하고 그것들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조선신보》는 조선에서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난 “대담하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은 10월 17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위한 경제 개혁·개방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불리게 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14년 1월 부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농업분야에서 준가족농 방식이, 그리고 산업분야에서는 독립채산제와 지배인책임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몇몇 기간산업과 국방산업을 제외하고 적용될) 지배인책임제는 지배인으로 하여금 구매, 생산, 마케팅, 가격 책정, 경영, 고용, 임금,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대한 자율권을 허가할 것이라고 한다.

대외 “개방”에 관해서 살펴보자.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일찌기 2012년도 말부터 도에 지역상황을 반영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미 3월 31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경제개발지구를 도마다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제1비서는 “경제특구시대”를 연 것이다. 조선이 지금까지해서 외국투자와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조선은 그 동안 합작법, 외국투자, 공동경영, 외국기업, 토지임대, 외국투자금융, 외국투자과산, 외국투자등록, 금융관리, 외국투자회계, 외국투자노동 관련 법을 제정했고, 가장 최근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

지난 4월 1일 조선의 최고인민회의는 ‘경제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29일 정령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법의 기본,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및 관리, 경제개발구 내에서의 경제활동, 장려 및 특혜, 신소 및 분쟁해결,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외국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의 설립을 포함한 경제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며, 경제개발구는 “특구”로서의 다양한 특권을 지니며, 투자가들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는 조선 모든 곳에 설치될 것이며, 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년간의 토지임대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50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은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기업들에게 허용한 기간과 동일하다. 더구나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조선은 11월 21일까지해서, 이미 라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 지역에 설치된 경제, 무역, 공업, 관광의 기존 4개 특구 외에, 정보통신, 자유무역, (녹색)경제, 관광, 자원개발, 고도과학기술 분야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10개와 경제개발, 농업, 관광, 추출가공 분야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발표했다.

5. ‘포괄적 안보전략’(CSS)의 채택에 따른 조선의 잠재 이익

우리가 생각하는 ‘포괄적 안보전략’은 ‘비핵화’, ‘평화정착’, ‘정치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협력’이라는 네 개의 병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이 우리가 제안하는 ‘포괄적 안보전략’을 수용하면,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 ‘조선-한국전쟁 종결’, ‘평화체제 수립’, ‘남북조선 화해협력’,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분야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사적인 업적들은 김정은 제1비서가 자신의 새 시대를 개막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1)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

김정은 제1비서는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전념해 왔다. 조선은 정전체제와 미국, 한국, 일본 및 다른 나라들과의 지속된 대결 때문에 그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한 극적인 변화와 개방을 도입하지 못했다. 비록 조선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관리체계의 발전을 진행 중이지만,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외국 투자자들이 조선에 상당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조선 국내의 안정된 사업환경인데, 조선에서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변화가 이것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전략지정확적인 맥락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대결의 시대가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하고, 근래 가장 큰 긴장 원인이었던 핵과 미사일문제를 조선이 국제사회와 협력해가며 해결 중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 발전과

조선반도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다.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조선 국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조선은 경제 발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경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엔안보리와 개별국가들의 대조선 제재의 해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조선이 ‘포괄적 안보전략’ 과정과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주도적으로 지지할 경우, 경제제재 해제 및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따르는 상당량의 자원을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조선 민족과 조선 국가의 존엄성을 위한 복지, 교육 및 문화적 기초를 증진시키는 물질적 기초인 경제 발전을 수월케 할 것이다.

2) 조선-한국전쟁의 종결

법률상으로 조선과 중국은 아직도 미국 및 한국과 전쟁 중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정전체제와 전시상태의 지속은 현상유지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이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제약한다. ‘포괄적 안보전략’ 과정과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창설을 위해, 참전국들의 국가원수들은 조선-한국전쟁의 종결과 정전체제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조선이 미국과 한국과 협력해 조선-한국전쟁을 끝낼 경우, 조선으로서는 한미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 사이의 평화과정과 관계개선은 치명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조선의 막중한 국방비 부담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며, 경제,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투자 증진 및 통일을 향한 남북조선 화해협력의 진전을 위한 기회가 조선에게 주어질 것이다.

3) 평화체제의 수립

조선-한국전쟁의 종결은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과 미국, 조선과 한국간의 적의를 종식시킬 것이며 조선과 미국 또 조선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들은 조선반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를 해체시킬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조선에게 무역확장과 외국투자 유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에게 열강과 주변국들과 예전보다 균형잡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조선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와 대치한 이후 점점 줄어들었던 국제사회에서의 운신의 폭을 이제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강국 하나에만 과도하게 편중된 의존을 탈피함으로써 독립, 즉 외교정책에서의 ‘주체’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4) 남북조선 화해협력

조선이 ‘포괄적 안보전략’을 지지함으로써, 조선-한국전쟁이 종결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성과는 남북 화해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인력과 물질적 자원의 광범위한 교환과 협력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 정치외교,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이 크게 상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민족통합은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상승될 것이다.

전면적인 남북조선 화해협력은 조선민족이 “분단 민족”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분단되지

않은 하나”로서의 조선민족의 정체성의 재확립은 남북조선간의 공식적이고 상업적이며 문화적인,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협력으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이득과 더불어 통일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남북조선에게 조선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인 ‘국가연합’(‘낮은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가연합의 개념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때 서명된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조에 들어있다.

5)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정전체제와 조선핵문제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부정적 결과 중 하나는 조-미 및 조-일 관계정상화 기회의 상실이다. 조선의 ‘포괄적 안보전략’의 수용은 결국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에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

일단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조선은 중국과 미국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을 재개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조선에게 있어서 바로 이웃에 있는 강력한 중국의 존재는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과 협력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강대국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접근에 기초한 조선의 궁극적인 생존과 발전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현재 조선의 대외경제관계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냉전시대에 조선은 소련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조선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백년친구도 백년숙적도 없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6)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선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앞서 언급한 제재 해제 및 경제 발전, 조선-한국전쟁 종결, 평화체제 수립, 남북조선 화해협력, 대미 및 대일 관계정상화, 그리고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크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핵문제는 정전체제와 함께 조선반도 냉전구조를 장기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조선은 자신의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 제거’를 명시했으며,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유엔안보리 제재, 적대적인 군사안보위협 등과 같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포기’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전체제 하에서 조선-한국전쟁의 지속과 같은 ‘조선반도 문제’의 ‘근본원인’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핵과 미사일 문제, 유엔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남북조선 간의 충돌, 군사안보 위협과 적대행위 등과 같은 조선문제의 ‘증상’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병의 근원과 증후는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처방이다.

조선반도 문제의 근원치료와 증상제거가 단지 동시에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동시에 그리고 단계별로 추구되는 ‘하나의 단일한’ 과정으로 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보도를 보면, 조선이 현재 비핵화, 정치, 군사, 경제라는 네 분야의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조선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다단계”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접근법은 ‘포괄적 안보전략’의 접근법과 맞아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우에 있는 5절은 포괄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는 중요 이슈들과 동북아비핵무기금지대의 창설에 대한 조선의 입장과 시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다음 6절은 조선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영향과 고려사항을 다룰 것이다.

6. 조선을 위한 ‘포괄적 안보전략’의 영향와 고려사항들 (질문)

새로운 개념적 틀인 ‘포괄적 안보전략’이 조선을 위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영향들과 고려사항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여기에 나열한다. 이 비공식적인 질문들은 조선 측 회담자들과의 대화를 쉽게 하고, 이 질문들을 조선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 이 ‘포괄적 안보전략’ 틀을 수용하는 경우, 김정은 제1비서는 이를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이 ‘포괄적 안보전략’ 틀은 조선의 지도자가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대화와 협상” 혹은 “병진로선”을 시작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전략적 리더십”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하는 김정은 지도자의 노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조선이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을 노력하는 데서 어떻게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김정은 제1비서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의미있는 경제실적을 내는 데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어떻게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줄 수 있을 것인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어떻게 남북 화해협력 및 통일을 증진시키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어떻게 조선이 자신의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함을 느끼도록 도와 줄 것인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은 조선/중국과 미국/한국 양측 간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 이 ‘포괄적 안보전략’ 틀이 조선으로 하여금 김일성 주석이 서거할 때까지 15년 간 무려 44회나(《김일성저작집》) 조선반도 및 동북아 “비핵평화시대”를 제안하고 옹호했던 그의 “유훈”을 계승하고 실천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미국,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도록 어떻게 허용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주체” 혹은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조선의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수립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대결보다 협력을 선호하는 “신형 대국관계”의 맥락에서 미국-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신형 대국관계”를 진전시키는 맥락 속에서 미국, 한국, 일본을 다루는 데서 어떻게 조-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또 주한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일미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우리”식 (“조선”식) 경제제도 및 관리 개선(개혁)과 대외 개방을 돕고 이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미국, 한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조선-한국전쟁을 종결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어떻게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걸 도와주는가? 그것이 동북아 우호협력조약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조선반도에서 “현상유지적”(분단고착적)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정착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조선의 지도부가 3월 31일 발표한 “전략로선”을 재고하고 6월 16일 대미 제안에서 시사된 것처럼 그 로선을 수정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가 속도를 내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B-52와 B-2 스텔스폭격기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한국영공으로 비행시켜 조선을 가상목표물로 지정하고 모의 핵폭격 훈련을 했던 것과 같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미국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 이 새로운 전략 틀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어떻게 방지하도록 도와주는가?
-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조선의 핵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조선의 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 수용 여부가 주변국들의 비핵무기지역에 대한 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6자회담 당사국 정부들이 이 새로운 전략 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내 지지가 필요한가?

1) 전시상태의 종결

- 조선-한국전쟁의 종결을 합의하고 선언해야 하는 당사국들은 어느 나라들인가?
- 이는 조선반도 및 동북아에 남아있는 냉전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이는 조선이 경제 발전, 평화체제, 남북조선 간 민족화해협력 등의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진로를 도입하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 전쟁이 종결되면, 조선이 얼마나 많은 여유자원을 경제에 재분배를 하여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 조선-한국전쟁의 종결은 어떻게 민족통합과 통일을 증진시킬 것인가? “결국 이뤄질” 남북통일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2) 영구적인 지역 안보이사회의의 창립

- 안보이사회 규칙은 누가 정하나?
- 규칙을 강제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존재하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장치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위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와 훈련이 필요한가?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훈련받고, 또 본부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 이 기구에 누가 자금(기금)을 투자 할것인가??
- 이 새로운 기구는 아세안, 아세안지역포럼,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창립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다른 다자기구들을 ‘약화’시키는 식으로 만들 것인가?

3) 상호위협 감축 및 상호 적대화 철회의 선언

- 미국과 조선이 모두 서로에게 가하는 위협과 그것을 양측에서 감소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호위협 감축’ 개념이 조선반도 문제를 다루고 조선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 데 왜 중요한가?
- 1991년 조선반도 문제와 조선핵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페리 프로세스’가 기초했던 ‘상호위협 감축’ 전략이 아직도 조선핵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 상호 적대화 철회 선언이 조선에게 어떤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는가?
- 상호 적대화 철회의 선언이 조선으로부터 오는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상호 적대 의도가 없다고 선언됐는데도, 여러 나라들의 국내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이 외부로부터오는 위협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에 호소할 구실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상호 비적대 의도의 선언이 서로 자신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려고하는 조선과 한국의 경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필요의 지원 공급

- 동북아 지역협력을 하는 데서, 비핵화 과정의 이행이나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안의 일부로서 제기되는 에너지 필요 등,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는가?
- 조선은 원자로/경수로의 안전 평가와 훈련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인가?
- 필요하다고 확인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하여 보장하는 장치는

무엇이 있는가?

- 새로 생겨나는 수출입 기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 과거에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 비핵무기지대가 조선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안정화를 가져올 경우, 송유관이 조선과 한국을 통과하는 데 안전한 장소가 확보되는 셈인데, 이것이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송유는 중국의 이익에 합당할 것인가?
- 어느 나라가 우에 언급된 공사와 관련된 공급계약을 따낼 지 누가 결정하는가?
- 의미있는 전력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새로운 항구와 기간시설이 필요한가?
- 지역 전력공급체계를 만드는 데 어떤 이익들이 있는가?
- 무엇이 전력발전체계를 합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 어떤 신뢰구축조치들이 역사적으로 양숙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핵연료 주기나 우주에의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킬 다양한 상호의존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5) 제재의 해제

- 제재가 해제되면, 어떤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생겨날 것인가?
- 조선 돈의 태환(호환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조선은 중국의 동북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조선이 경제 제도 및 관리 발전(개혁)과 대외관계를 개방하는 데서 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 조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조선의 법적, 제도적 보장, 과정, 법원이 필요한가?
- 제재 해제가 조선의 특별 경제지구, 관광지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제재 해제가 남북조선 간의 경제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제재가 해제되면 ‘생물다양성 회랑’처럼 새로 시작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6) 비핵무기 지대의 창설

- 비핵무기지대의 창설이 조선과 조선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려는 조선의 결정과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 철폐에 대한 조선의 요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비핵무기지대의 창설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및 핵잠수함들이 한국 영공과 영해를 출입해온 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비핵무기지의 창설이 미국, 중국 및 조선의 ‘핵 독트린’을 어떻게 보완하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미국과 중국의 비핵무기지의 창설 정책이 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를 위해 서로 충분히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가? (첨부 2)
- 동북아비핵무기지대에 중동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화학무기와 같은)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도 포함해야 하는가?
- 비핵무기지가 미국의 중국, 러시아, 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비핵무기지는 미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무산 제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비핵무기지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 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비핵무기지가 미국과 중국이 비핵무기지의 영역에 핵잠수함 등 핵전략을 전개하는 능력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만일 미국이 더 이상 핵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 없이 “존재적 핵억지력” (지역 안에는 없지만 지역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존재만으로 생기는 핵억지력)으로 대체할 경우, 그것은 조선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중국이 일본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을 제공하기 위해 ‘비선제공격 정책’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중국에게는 어떤 이익이 되는가?

7. 조선이 ‘포괄적 안보전략’ 개념을 적극 지지할 것인가?

조선의 핵무기 개발은 어떻게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창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의 정책과 역할은 동북아 안보관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조선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비핵무기지의 창설, 규정, 유지를 돕거나 방해하게 될 것이다.

조선은 ‘아래와 같이’ 함으로써 새로운 ‘포괄적 안보전략’ 틀의 추진을 진전시킬 것인가?

- 각국의 안보분야의 상대역들과의 ‘정부 및 민간단체 대화’를 개최하여 이 ‘포괄적 안보전략’을 모색하고,
- 조선의 핵심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지원하거나, 비핵무기지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주최하고,
- 포괄적 지역안보 해결과 동북아비핵무기지의 창설을 돕거나 깨뜨리는 현저한 중요이슈들에 대해 연구·분석을 행하고,
- 전반적인 자각 운동의 일환으로 관련 언론매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학자들과 여론지도층을 포용한다.

우리는 생산적인 관계와 새로운 ‘포괄적 안보전략’ 틀을 기대합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토론을 원하시는 경우, 우리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 피터 헤이즈

첨부 1: <<김일성저작집>>에 나타난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의 “비핵지대”에 대한 주장

1.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제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55, 360, 368페이지.

...런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령강들의 어떠한 침략과 전쟁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것을 주장합니다.

2.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81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제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42, 43, 43-44페이지.

...지금 동남아세아나라 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이 지금 추진시키고있는 동북아세아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문제가 세계 대다수 나라 인민들의 동정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민과 일본인민뿐아니라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도 그것을 적극 지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것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바라지 않고있는것만큼 우리 두 당이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문제를 들고나가는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한다고 하여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지금 당장 핵무기들을 철수하거나 파괴해버리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나가는 우리 두 당의 주장은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념원을 존중하는것으로서 그들의 지지를 받을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두 당이 오래전부터 토의해오고있는 동북아세아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선언을 발표해야 할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두 당이 동북아세아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구상을 실현하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일부 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가 이 주장을 들고나가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평화애호운동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아스까다위원장선생은 이번에 일본사회당대표당이 우리 나라에 온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동북아세아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하는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두 당이 동북아세아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공동선언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그것을 발표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일본사회당대표단과 한 담화”(1984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제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34페이지.

...몇해전에 우리 두 당은 동북아세아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전, 반핵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는 정당한 조치로 됩니다. 이시바시위원장선생이 우리 두 당이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아세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널리 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1986년 9월 6일),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68~169, 170~171, 172, 175페이지.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인류앞에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는 국제평화의 해에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열린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감을 가지고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막는것은 국제정치무대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회의를 하고있는 여기 평양은 미국의 핵탄두가 항시적으로 겨냥하고있는곳입니다. 바로 이러한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과 옹호투사들,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핵,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한다는 사실자체가 핵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옹호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며 이번 회의의 의의를 가일층 부각시켜줍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평양국제회의는 제국주의 핵광신자들과 호전분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될것이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는 큰 힘과 고무를 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들어와서만 하여도 군사당국자회담을 열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와 군사적대결을 해소할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였으며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적극적인 평화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고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의 하나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입니다.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전부의 이름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모든 외국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5.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41페이지.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인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6.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 보낸 축하문”(1988년 10월 18일),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62페이지.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며...

7. “신년사”(1990년 1월 1일), 《김일성저작집》 제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43페이지.

...우리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8.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제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21페이지.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짓부시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반전, 반핵평화옹호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9. “일본 《마이니찌신봉》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1년 4월 19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7페이지.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10.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국제의회동맹 제85차 총회 개막회의에서 한 연설) (1991년 4월 29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50페이지.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군축을 실현하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평화옹호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11. “일본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1년 6월 1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76페이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대하여 일본사회당과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12.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81페이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13.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1년 9월 26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26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14. “신년사” (1992년 1월 1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80, 281페이지.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더우기 핵사찰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하는것이고 안한다면 안하는 것이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15.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성원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20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89페이지.

...나는 이번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울여온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를 보게 된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데 하나의 이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입니다.

16.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4년 4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66페이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진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17. “일본방송협회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7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77~378, 378페이지.

...북과 남이 합의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좋은 전망을 열어놓은 사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은 리행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북남대화를 결렬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핵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습니다. 비핵화공동선언과 핵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을 실현하며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18. “미국 씨엔엔텔레비존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4년 4월 17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82페이지.

...지금 미국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에게 대한 압력소동을 벌리고있으나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 아는바와같이 우리 공화국은 비핵, 평화애호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핵무기가 없으며 그것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것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19.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1994년 6월 30일), (1994년 4월 17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68 페이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같은 조선사람들끼리 죽일내기를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남조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채택하였다...

첨부 2: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미국, 중국 및 유엔의 입장

<p align="center">“비핵무기지대에 대한 미국, 중국 및 유엔의 입장”</p> <p align="center">(2011년 11월 11일 일본 도쿄의 국제하우스에서 동아시아 핵안보워크숍을 위해 노틸러스 연구소가 준비)</p>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비핵무기지대들의 공통특징(1999년 유엔군비축소위원회 보고서)
우리는 적절한 조건하에 엄격하게 시행되면 지역 및 국제적 평화,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핵무기지대의 창설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유엔 군비축소위원회 지침서에 부합하는 비핵무기지대 설립의 핵심조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비핵무기지대 창설은 핵군비감축, 핵무기 확산방지, 그리고 국제 및 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 비핵무기지대와 관련된 다음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비확산체제, 세계평화 및 안보에 기여한다.
비핵무기지대 창설을 위한 주도권은 지역의 해당국들이 갖는다.	비핵무기지대는 관계국들이 상호협의를 통한 자발적인 합의를 기초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창설되어야 한다.	지역국들 간에 자유롭게 합의한 조치들에 기초한다.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나라들은 비핵무기지대에 참여한다.	비핵무기지대 조약들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비핵무기지대 밖의 나라들의 내정간섭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 자체로부터 생겨난다.
비핵무기지대의 조치들은 지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한다.	비핵무기지대의 비핵무기 지위는 어떤 다른 안보 메커니즘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비핵무기지대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군사동맹 등과 같은 평계로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비핵무기지대를 창설함으로써 기존의 안보장치들을 교란하여 지역 및 국제 안보에 해를 끼치면 안된다.	비핵무기지대는 분명한 지리적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비핵무기지대는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면 안 되며, 비핵무기지대 조약서명국들과 주변국들 간에 영토주권이나 해상권, 이해관계를 놓고 분쟁 중인 지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지대 창설 협상에 해당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핵무기지대는 당사국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핵폭발장치들을 개발하거나 처리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금지한다.	핵무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검증장치들이 비핵무기지대에 설치되어야 한다.	핵보유국들을 포함한 해당지역 밖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비핵무기지대조약 서명국들에 의해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비핵무기지대조약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를 제약하면 안 된다. 특히 공해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 영해나 군도수역의 무해통항권, 국제해협의	비핵무기지대는 경제, 과학 및 기술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참여국가들 사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용이하도록	비핵무기지대조약과 의정서들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핵보유국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통과통항권, 그리고 군도수역의 군도해로 통항권을 제약하지 않는다.	해야한다.	국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핵무기지대 창설은 국제법상 존재하는, 항만 방문요청 및 타국으로의 영공비행을 포함한 통항권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무기보유국들은 비핵무기지대의 위상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비핵무기지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핵무기 비사용과 비사용위협을 약속해야한다.	비핵무기지대조약과 의정서들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지대 내에 영토를 갖고 있거나 영토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들을 포함시켜야한다.
“소극적 안전보장(핵불사용 보장)에 대한 케네디 대사의 발언,” CD 소극적 안전보장의 전체토론회의, 2011년 2월 10일. (http://geneva.usmission.gov/2011/02/10/conference-on-disarmament/)	“‘중앙아시아-비핵무기지대’ 국제회의에서 중국대표단장의 연설,”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7년 9월 15일.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국제조약들을 존중하기 위해,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
		유엔해양법에 대한 유엔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합치해야 한다.
		해당국들이 외국 선박과 비행기들의 항구와 공항의 이용 허용 여부, 또 자국의 영공과 영해의 통과 허용 여부에 대해 자유로운 결정을 하도록 해야한다.
		당사국들은 각국 헌법의 요구사항과 부합되게 (비핵무기지대조약을) 시행해야 한다.
		조약 당사국들이 어떤 종류의 핵폭발장치든 개발, 제조, 제어, 소유, 실험, 배비, 운반을 금해야 한다. 또 비핵무기지대 안에 어떤 종류의 핵폭발장치든 그것을 배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p>★ 미국, 중국 및 유엔 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일본의 비핵원칙에 대해서도 (우와 같은) 일련의 특징과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러시아 측의 기준을 찾지 못했다.</p> <p>★ 우의 다양한 색깔은 미국, 중국 및 유엔의 바람직한 기준들 간의 공통점 혹은 합치성 정도를 표시한다.</p>		